

보도시점

2026. 9. 1.(화) 11:00

배포

2026. 9. 1.(화) 06:00

2026. 9. 2.(수) 조간

“입양 前 최대 10일, 함께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보호동물 ‘예비입양제’ 첫선

- 입양 망설이게 하던 성격·행동·적응 문제, 가정에서 미리 확인
- 직영 동물보호센터부터 우선 시행... 운영 성과 검토 후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이 보다 안정적으로 새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입양 전에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함께 생활해 본 후 최종 입양을 결정하는 “예비입양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아이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 가정 내 적응 여부 등을 잘 몰라 선불리 입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예비 입양자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예비입양을 신청하면 입양을 전제로 보호동물을 최대 10일 동안 집으로 데려와 실제 생활을 함께하며 성격과 행동 특성, 기존 반려동물이나 가족과의 적응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충동적 입양으로 인한 파양이나 재유기 우려를 낮추고, 입양 희망자의 심리적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입양을 희망하는 국민은 예비입양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지자체 직영 센터를 중심으로 제도를 우선 운영한 뒤 성과 분석과 현장 의견 등을 검토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농식품부 고시)’ 개정에는 예비입양 제도 외에도 보호동물의 건강관리와 동물보호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전문화를 위해 “구조·보호 전문센터”와 “분양 전문센터”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입소 관찰실과 격리실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예비입양제도는 입양 희망자와 보호동물이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완전한 가족’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양 문턱을 낮추고 책임감은 높이는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주요 개정 내용

담당 부서	동물복지정책국 개식용종식추진단	책임자	과 장	최경철 (044-201-2280)
		담당자	사무관	임하덕 (044-201-2987)



□ 현황 및 목적

-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은 매년 10만 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입양률*은 24% 수준에 머무르는 등 저조한 실정
* '21) 32% → '22) 27% → '23) 24% → '24) 24% → '25) 26%
- 유실·유기 동물의 입양 활성화 및 보호동물의 건강관리 강화 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 추진

□ 주요 개정 내용

-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전문화를 위해 구조·보호 전문센터와 분양 전문센터로 구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의 2)
 - (기존) 구조~분양까지 업무 수행 → (변경) 기존 동물보호센터 운영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구조·보호 전문센터"는 구조~반환까지의 업무 수행, "분양 전문센터"는 질병관리~분양까지의 업무 수행으로 업무수행 범위 선택 가능
- 전염병 감염 동물의 입소에 따른 질병 전파 예방을 위해 입소 관찰실과 격리실 분리 및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안 제11조제2항)
 - (항 신설) 입소 동물이 5일 이상 입소 관찰실에 분리되도록 하고 입소 관찰실과 격리실 간의 거리를 충분히 둘 수 있도록 규정
- 책임있는 입양 및 파양·재유기 예방을 위해 최종 입양 전 10일 이내 예비입양이 가능하도록 제도 신설(안 제19조의 2)
 - (신설) 입양 전 일정기간(10일 이내) 입양을 전제로 예비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동물보호센터 전문화를 통해 입양센터 활성화 등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부터 분양까지 보다 체계적 관리 기대
- 신규 입소 동물의 전염병으로 인한 동물보호센터 내 질병전파 차단
- 입양 적합성 사전 확인을 통해 보호동물의 재입소 감소 및 보호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 기대